

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
참가결과

2004. 12. 21

환 경 부

목 차

<u>I. 회의개요</u>	1
<u>II. 주요의제별 논의결과</u>	1
<u>III. 정부대표단 활동 및 주요성과</u>	4
<u>IV. 평가 및 향후대책</u>	6
<u>[참고자료]</u>	9

I. 회의 개요

가. 일시 및 장소 : 2004. 12. 6~17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

나. 참가 현황 : 180개 당사국, 국제기구, NGO 등 약 6,000여명

다. 한국대표단 : 환경부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국조실·외교부·산자부 등 44명 참가(산업계·NGO 등 44명 참가)

II. 주요 의제별 논의 결과

가. 기후변화협약('94발효) 10주년 성과평가 및 향후 전망

① 기후변화로 파생된 문제의 평가

- 과거 20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분석(280→368ppm)
- 향후 10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예측(540~970ppm)
- 1990년 기준 기온상승예측 : 0.8~2.6°C(2050년)→1.4~5.8°C(2100년)

② 최근의 온실가스 증가 추이('90~'01)

- 선진국은 6.6% 감소
 - 동구권 국가의 경제규모 축소가 주된 요인 : 39.7%
- 개도국은 크게 증가(한국 86%, 인도 69%, 브라질 57%)

③ 기후변화 대응 대책

- 선진국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정책으로 전환 중,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

4] 기술발전에 의한 새로운 기대

- 고효율에너지기술의 급속한 발전, 차세대 에너지 기술개발 착수

5] 기후변화 적응전략

- 기온상승, 계절변화, 이상기후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범지구적 전략 마련 필요

6]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

- 공공 및 민간부문에 의한 산업계·공중의 인식제고, 공동참여 유도

7] 교토의정서 채택 및 이행

- 과거 10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교토의정서의 채택('97.12월)
- 러시아의 비준으로 '05.2월 발효되나 미국의 불참이 큰 맹점

8] 향후 과제(시간 없다)

-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신축적이고 수용가능한 접근 필요
- 종국적으로 협약 목표달성은 가능하나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

나. 기후변화 완화방안과 적응 방법 및 수단 검토

- 신재생에너지 보급, 저에너지 소비형 수송체계 확산 등 우수 사례 공유
- 기후변화와 건강·농업·수자원·생태계 영향 분석 모델 검토

다.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체계 논의

-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재정적 지원 체계를 '06년까지 마련

- 공공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정의, 이해제고 활동을 '05년 기술이전전문가그룹(EGTT)사업에 포함(우리나라 제안)

라.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('08~'12) 이후의 의무부담 방식

- ◇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의무부담 방식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논의
 - ※ 교토의정서상 1차공약기간이후의 의무부담방식은 '05년부터 공식 논의 예정
- ◇ '05년부터 세미나 형식으로 논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으나 선진국·개도국간 대립이 예상됨

- EU는 1차 공약기간이후의 체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도국의 참여 확대 주장
- 개도국은 의무부담 참여확대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 반대
- 미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보장되는 신축적인 기준설정과 과학적인 이행방안 마련 주장
 -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경제체제 구축, 공기중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계획 등 발표 (50억 달러 투자)
- 우리나라는 EIG그룹을 대표하여 각료급회의 기조연설(환경부장관)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 표명
 -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각국의 사회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
 - 선진국의 새로운 에너지개발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진전된 노력 촉구
 - 기후변화 속도 조절과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식을 국제사회가 함께 강구토록 요청

※ EIG(Environment Integrity Group): 한국 · 스위스 · 멕시코 · 모나코 ·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협상그룹

- **본의제와 관련** 금번 당사국 총회는 종료일(12.17)을 연장, 철야 협상과정을 거쳐 12.18(토)11:00경 다음과 같이 결정

〈기후변화협약사무국 주관으로 정부전문가 세미나(SOGE) 개최〉

- 시기 및 장소 : '05.5월 독일 본(기후변화협약사무국 소재지)
- 참가 대상 :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(189개국)
- 진행 주관 : 의무당사국과 개도국 대표 각 1인으로 공동 진행
- 본 세미나 개최를 둘러싼 이해 그룹 입장
 - ☞ 선진국(EU 등) :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의무부담방식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개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
 - ☞ 개발도상국 : 본 세미나에서 개도국에게 어떠한 의무부담이나 이행방안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
-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렬한 논쟁을 통하여 세미나 개최로 조율

III. 정부대표단 활동 및 주요 성과

가. 수석대표(환경부장관)

□ EIG 그룹을 대표한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표명

□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한 상호협력방안 논의

- 멕시코 :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- 캐나다
 -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합의
- 미 국
 - 「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14개국 파트너십」 사업 참여 합의
 - 「수소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」 협력확대 합의
(현재 산자부·미에너지부간 협력 중)
- 호 주
 - APEC 「기후변화대응 서울 워크숍」 공동개최 확인('05. 4월)
- 프랑스
 - 향후 온실가스 감축방식 논의시 한국의 특수상황 고려 요청

나. 실무대표단(관계부처 합동)

- 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(SBSTA) 및 이행자문부속기구(SBI)회의 등 실무회의 45회, 부대행사(side events) 99회 참가
- 비부속서 I 국가의 “국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워크숍” 유치 ('05. 9월, 서울)
- 우리나라 정부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사례 홍보관 운영(에너지관리공단 주관)
- EGTT 전문가 연임불가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할당1석 금년 말 임기종료로 CDM 집행위원회 국가보고서 자문그룹 등 진출 협조 분위기 조성

다. 산업계 및 NGO 대표단

- 교토메카니즘, 선진국 주요기업사례 발표 등 기업관련 18개 부대행사에 참여 및 정보 수집
- NGO 주관 소그룹회의 및 부대행사(15개)참가

IV. 평가 및 향후 대책

- ◇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개시될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
- ◇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과 입장을 갖는 신흥공업국가들과의 제휴를 통해 수용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범 정부차원의 온실가스감축대책을 강력히 추진

1] 기후변화대응 추진 체계

- 범정부차원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, 신재생에너지 개발, 산업 구조개편,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에너지와 온실가스 정책의 통합적 대응책 마련 추진
 - 제3차 기후변화정부종합대책('05~'07)에 적극적으로 반영
- 「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」의 상설기구화 또는 전담조직 신설 검토

② 전략적인 기후변화협약 협상대책

- 우리나라의 사회·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토의정서 1차 공약 기간 이후 방식 마련
- 협상전문가 선정·육성 및 기후변화대응 국제 파트너십 제고
-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본부에 기후변화 전담요원 파견 검토
 - ☞ 협약부속기구(SBSTA, SBI) 주관 전문가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나 실상 파악 미흡
-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멕시코·중국·인도·ASEAN 등 개도국과의 정책대화 채널 구축 등 협력 강화

③ 교토메카니즘 이행기반 구축

- 시장기능을 활용한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 적극 추진
 - 폐기물 매립지 및 산업공정 개선, 해외조립 CDM 사업 우선 추진
 - ※ 대북한 황폐지 조림지원 사업을 CDM 사업으로 연계 검토
- 배출권거래제도(ET) 시범사업실시('05 상반기까지 정부안 확정 시행)
 - '06년부터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

④ 효율적인 당사국 총회 참가 방안 마련

- 제10차 총회시 회의상황실(CP) 설치·운영경험을 토대로 발전 방안 마련
 - 매일 회의시작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 의제 점검 및 역할 분담
 - 차기 총회시 회의상황실을 보다 체계적·조직적으로 운영

-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있는 모든 부처가 의제별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가하여 의제별 논의 배경·경과·시사점을 정확히 파악

5] 정부전문가 세미나('05.5월 독일 본)참가 준비

- 동 세미나에서 발표할 우리나라 입장과 동 입장을 뒷받침하는 선발개도국으로서의 특수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
-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정부의지를 담은 정부차원의 전략안 마련